

尹·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

“기업 강요, 정권 끝나고 큰 문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는 혹평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제3차 변제안을 두고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이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일공약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며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서서 요란한 광파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늦게 왔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인과 국민 자존심까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별과 공화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 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을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민주당 대일공약외교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최악 결과... 국민 자존심 내줘" 전문가 "尹 정부,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라고 인식"

외교부인위원회 한반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이 강행된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 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외교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혹평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한 정부의 제3차 변제안 해법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삼성, 미래재단(이 과거 문제였던 것처럼 정부가) 기업에 강요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대중 오부처 선언' 등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점, 책임을 회피하는 제3차 표현을 쓴 점을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뉴스시스



신임 전개공 사장 임명장 수여 2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장 수여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임명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이명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행정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한 자체관리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전무하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되어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특히 전주·군산·익산지역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전주 93.3%, 전주 96.9%, 익산 87.5%)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안전점검 및 공동이용 시설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만큼 도가 나서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이 유를 밝혔다.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및 공용시설물 보수 등 관리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지원하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별도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아동에 대한 관심, 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

이남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아동 보육시설 찾아

이남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현장을 찾아가 지역민 삶에서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살림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남숙 위원장은 이날 전주시 호성동 소재 호성보육원과 전주영아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영유아들의 보육을 함께 돌보며 현장 의견에 대해 귀 기울였다.

호성지역의 대표적 보육시설이다. 이남숙 위원장은 "아동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 지역 미래에 대한 관심"이라며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피는 복지환경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안건 10건 심사·처리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3회 임시회를 열고, 3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본격적

/임실=진홍영 기자

4·5전주를 재선거 후보자 말·말·말

“수소도시 완성 위해 전주·완주 통합 추진”

진보당 강성희 후보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강성희 후보(진보당)가 전주·완주 수소동맹을 통한 수소 도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성희 후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 "수소의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의 3박자를 갖춘 수소 경제 1번지 전북의 메카, 수소도시 전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전북은 국내 중대형상용차 생산의 95%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자 전북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라고 분석하고, "수소차 특구를 조성해 '수소상용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국회 의결로 '중대형상용차 산업 정책협의회' 신설과 중대형 상용차산업의 미래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 사업체 지원 및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 노후 중대형상용차의 조기폐차 지원 등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이어 국내 유일의 수소 버스생산자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다인한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상생형 수소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수소도시 완성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주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文 당내 갈등 소재로 소환시켜선 안돼”

민주 박용진 의원, “文, 민주당 수습 태도 중요하다 말해” ‘당직 개편’ 반대... “공천 아닌 총선 승리에 관한 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내 갈등의 소재로 소환시켜서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막제를 수습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국정원장이) 당내 현안으로 자주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본다"며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만 전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 이야기하셨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사법리스크로 인한 사퇴론이 불거진 이 대표를 감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박 의원은 이를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경남 양산사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무주군의회, 의회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주군의회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과 소통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바로잡으며 정확한 결과물을 얻고자 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해 제9대 의회 출범 후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내부 연구단체인 '무주군의회 발전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황인동)'를 결성했다. 의원들은 연구회에서 의정방향에 대해 집중토론을 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 (사)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무주군의회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현황과 설문조사, 비교 및 전략체계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무주군의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 군민은 무주군의회가 주민의견 수렴을 잘 하고 있다(46.5%)고 평가한 반면 입법기능(5.6%)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군민이 바라는 무주군의회 역할 수행 제고방향은 의정활동평가제도와 의원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군정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32.3%)과 주민청문·민원처리율 강화(27.6%)

지금 여러가지 약제가 있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약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봤다. 중요한 것 같고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내용을 겪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당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몇몇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 당직 개편 논란을 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공천 다름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둘러싼 문제"라며 "지금 현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어떤 대안은 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다. 정책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당직 개편하는 걸로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지 하는 의문"이라며 "당직 개편도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만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 제시된 제9대 운영방향은 '의정고도화로 신뢰받는 무주군의회'이다. 당면목표는 무주군의회가 의정활동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도와 만족도를 올리는 일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굳건히 하고 의원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며 조사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소통의정 과 현장방문 확대, 홍보채널 다변화, 의정활동 평가와 포상제도 도입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도출됐다.

무주군의회는 연구보고서에 중점과제, 장기과제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만큼 연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